

	<h1>보도자료</h1>	2016. 3. 17(목)	
		작성 ·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정보과 과장 이인용 / 사무관 민지현 (Tel. 044-200-2407)
<p>* 엠바고 : '16.3.16(수) 13시부터 사용 (3.17 조건부부터 보도)</p>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효과 5.7조원

- 국조실, 규제개혁 완료과제 3,992건 점검, 200개 대표적 현장체감사례* 조사
- * 규제개선 결과, 인허가가 완료됐거나 제도개선으로 국민·기업에 혜택이 현실화된 사례

대표 현장사례

① 입지 규제를 개선하여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통관입지 등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확대 ('15.6)
 - ⇒ 외투기업 S사 증설 착공('15.11) : 총투자 규모 **6,500억원**, '17.7월 완공시 신규고용 **3,000여명**
- ▷ 도시공원 활용제한 완화(연계도로 허가)로 기업여건 개선 신규투자 유발 ('15.4)
 - ⇒ 반월산단 S반도체 증설 착공 ('15.7) : 총 투자규모 **7,000억원**, '16.3월 완공시 신규고용 **2,000여명**
- ▷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지역지구 지정시 안전성 협의 된 경우 경사도 규제완화('15.11)
 - ⇒ 규제로 중단됐던 강원도 **3,600억** 규모 R관광단지 조성사업 재추진

② 기업부담을 경감하여 신사업 기획을 확대하였습니다.

- ▷ 해양심층수를 (기존 6개 식품→)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15.8)
 - ⇒ 강원 S기업, 경북 P기업 등 '15.12월까지 **30억원** 규모 매출 증대 실현
- ▷ 카셰어링 서비스업 허가기준 완화로 공유차 시장 활성화 ('14.7, 11, '15.12)
 - * 사무실 확보의무 면제, 주차장 계약 기간 완화(2년→1년), 주차장과 차고지 중복확보 면제
 - ⇒ 전년대비 카셰어링 **회원수 6.3배**(40만→250만), **서비스존 2.6배**(14백개→36백개), **차량수 3.1배**(2천대→6천5백대) 증가

③ **금융, 인력 등 창업·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 ▷ 코넥스 시장 진입시 중소·벤처기업의 외형요건(매출 10억원) 폐지 및 투자자 기본예탁금 완화(3억→1억원)로 중소·벤처에 대한 투자 활성화 ('15.6)
 - ⇒ 상장기업 수 증가(21 → 88개사), **시가총액 증가(0.5조 → 4.1조)**
- ▷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분야(3→4개) 및 기간(3→5년) 확대 ('15.2)
 - ⇒ 창업 4~5년차 기업의 공장설립 부담 완화로 **신규투자 활성화**

④ **생활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 말기암환자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 및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가능 ('15.12)
 - ⇒ 17개 의료기관 말기암환자 가정방문 호스피스 서비스 시범실시 중, 환자는 **저렴한 비용**으로(간호사 5,000원~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13,000원) **가정 호스피스 이용**
- ▷ 이사 오기 전 지역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전입신고 시 조치하면 사용 가능('15.8)
 - ⇒ 울산, 대구 북구, 영천시 등 **28개 지자체**('15.11월 기준)에서 **시행중**
- ▷ 신입생은 1차 합격대학 등록금 반환 전이라도 추가 합격대학 등록금 우선 지급 ('15.1)
 - ⇒ '15. 1학기 신입생 총 **1,830명에게 156억원 추가 대출** 실시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이석준)은 그간의 규제개혁을 통해 이루어진 현장체감사례 200건을 선정하여 국민과 기업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현장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이번 사례집은 현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선 완료된 3,992건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 '14.3.20 ~ '15년말 >

분류	기존규제 개선	손톱밀가시	규제신문고	규장 현장건의	경제단체 건의	총계
규제개선 완료	1,462	721	1,538	106	165	3,992

□ 선정된 2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152건의 경우 '15년말까지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실행되거나 공장증설 등 관련 인허가가 완료돼 투자가 시작됨으로써 총 5.7조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국조실, 부처 공동 검증)

* 예시 : ▲도시공원 활용 규제 완화(S반도체 공장증설 '15.7월 착공, '16.3월 완공, 7,000억원 투자)
▲수상태양광 환경규제 완화(보령 수상태양광 '15.10월 착공, '16.2월 완공, 64억원 투자)

○ 48건의 경우는 사업계획이 확정돼 '16년 중 착공되거나 제도 개선 실행으로 경제효과가 '16년에 나타나는 사례들이다.

* 예시 :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설비입지 규제완화(안산 C기업 3,000억원 투자기반 조성)
▲산업단지 내 복합구역 도입(부평국가산단 내 512억원 규모 투자계획 확정)

분류	투자 창출	부담 경감	소득 증대	총계(억원)
현장 경제효과	4조 5,200	8,600	3,300	5조 7,100

□ 200개 사례 분석결과는 규제개혁의 경제효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규제를 혁파해 나가야 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

□ 특히, 이번 사례집은 국민 불편을 해소해 준 생활 속 규제개선 부터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애로를 해결하여 투자·고용을 증진한 사례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

○ 국민과 기업이 생활주변이나 경제현장에서 규제개혁 종합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시적 효과가 나타난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며,

○ 또한, '16년 내 현장 이행될 과제도 또 다른 걸림돌이 없는지 점검하여 조속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무조정실 사무관 민지현(☎ 044-200-24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통관입지 등 규제개선

인천국제공항에는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 등에 일부 비관세가 적용되는 자유무역지역이 있었지만 지역 내 물류단지 중 56만m²가 자연녹지지역에 묶여 있는 등의 규제로 투자 유치가 어려웠다. 이 지역을 글로벌 물류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환적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외투기업 S사는 인천자유무역지역 내 투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15.6월)

☑ 외투기업 S사 증설 착공('15.11) : 총투자 규모 6,500억원, '17.7월 완공시
신규고용 3,000여명

(개선 전) 물류단지 내 56만m²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기간 25일, 미국행 화물은 환적지에서도 보안검색

(개선 후) 물류단지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기간을 10일로 단축, 미국행 환적화물의 보안검색 면제

2 도시공원 활용 제한 완화

S회사는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도시공원이 있어, 공장 간 직선거리는 180m밖에 안 되지만 물품을 운반하거나 설비투자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공장 사이에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끝에 6년 만에 도시공원 지하에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와 같은 규제개선을 통해 S반도체는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고 글로벌 LED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안산시, '15.4월)

☑ 반월산단 S반도체 증설 착공 ('15.7) : 총 투자규모 7,000억원, '16.3월
완공시 신규고용 2,000여명

(개선 전) 도시공원을 관통하는 연결시설 설치 불허

(개선 후) 반월산단 내 S반도체 1·2공장 사이에 위치한 도시공원을 관통하는 연결시설 설치를 허용

③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지역지구 지정시 안전성 협의 된 경우 경사도 규제완화

강원도 W시에서 관광단지를 만들려던 R사는 경사도 제한 때문에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딪혔다. 산지전용 대상 지역을 100㎡로 분할하여, 각각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의 40% 이하가 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강원도같이 가파른 산으로 된 지역의 경우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조성이 어렵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안전성에 대해 안전성협의를 되었다면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의 40%를 넘어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되어 R사는 다시 관광단지 사업 투자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 '15.11월)

☑ 규제로 중단됐던 강원도 3,600억 규모 R관광단지 조성사업 재추진

(개선 전) 산지전용허가는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의 40% 이하인 경우 가능

(개선 후) 지역·지구 지정시 경사도가 협의된 경우, 실시계획단계에서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의 40% 초과해도 개발 가능

④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에 사용

해양심층수는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미국, 일본 등에서는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다양한 식품과 음료가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해양심층수의 사용범위가 한정되어 시장 규모에 제한이 있었다. 모든 식품에 해양심층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되면서 강원도 지역 K사는 관련 시설을 증축하고 의욕적으로 신제품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해수부·식약처, '15.8월)

☑ 강원 S기업, 경북 P기업 등 30억원 규모 투자 유치

(개선 전) 해양심층수·처리수 사용이 두부류 등 6개 식품에 한정

(개선 후) 해양심층수·처리수 사용이 모든 식품에 가능

5 카셰어링 서비스업 허가기준 완화

카셰어링 서비스는 고객이 예약한 차량을 자신과 가까운 주차장에서 찾아가고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서비스로, 최근 소비자의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정작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대표 P씨는 고민이 많았다. 무인 대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도 영업하는 시군마다 의무적으로 사무소를 갖춰야 하고, 주차장을 2년 이상 계약해야 하는 등 업체 현실과는 맞지 않는 규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되면서 P씨는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고 서비스 개선에 힘써 회원수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 '14.7월, 11월, '15.12월)

☑ 전년대비 카셰어링 회원수 6.3배(40만→250만), 서비스존 2.6배(14백개→36백개), 차량수 3.1배(2천대→6천5백대) 증가

(개선 전) 카셰어링 사업을 위해서는 사무실 확보,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는 2년 이상 주차장 사용 계약, 차고지와 주차장 중복 확보 등 의무 부담

(개선 후) 카셰어링업체에 대한 사무실 확보 의무 면제, 주차장 사용계약 기간을 1년으로 축소, 차고지와 주차장 중복 확보 의무 면제

6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코넥스 시장 진입완화

개인투자자 A씨는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기본예탁금 요건인 3억원을 충족시킬 수 없어 투자를 할 수 없었다.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인 B사는 코넥스 시장에서 투자 받고 싶었지만 매출 10억원 요건에 미치지 않아 여의치 않았다. 규제 완화를 통해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장으로 더욱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기본예탁금 요건을 1억원으로 낮추고 상장기업의 매출요건을 폐지하는 등 진입문턱을 낮추면서 투자자도 기업도 코넥스 시장에 진입하기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 '15.6월)

☑ 상장기업 수 증가(21 → 88개사), 시가총액도 증가(0.5조 → 4.1조)

(개선 전) 코넥스 시장 진입시 기본예탁금 3억원, 매출 10억원 등 엄격한 상장요건 요구

(개선 후) 기본예탁금을 1억원으로 하향, 매출 10억원 등 외형적 상장요건 폐지

7 창업기업,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D씨는 금속 제조업 창업을 결심하고 공장을 짓고자 했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3년 동안만 면제되어 공장부지 공시지가의 30%인 6천만원을 내야 했고, 자금이 모자랐던 D씨는 공장을 지을 수 없었다. 이제 공장설립 부담금 4종에 대해 5년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D씨는 공장을 세우고 제조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다. (중기청, '15.2월)

☑ 창업 4~5년차 기업의 공장설립 부담 완화로 신규투자 활성화

(개선 전) 창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공장설립 부담금 3종이 3년간 면제
(개선 후) 공장설립 부담금 4종에 대해 5년간 면제

8 말기암환자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허용

A 씨는 최근 말기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집에서 마지막까지 모시고 싶었지만, 마음까지 약해지는 아버지를 돌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 늘 마음이 무거웠다. 아버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 입원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여의치 않았다.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호스피스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이제 가정뿐만 아니라 전용병동 이외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A씨 아버지도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평소 바람대로 집에서 임종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복지부, '15.12월)

☑ 17개 의료기관 말기암환자 가정방문 호스피스 서비스 시범실시, 환자는 저렴한 비용으로(간호사 5,000원~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13,000원) 가정 호스피스 이용

(개선 전) 전용 병동에 입원한 경우에만 호스피스 이용 가능
(개선 후)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 이용 가능

9]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전입 후에도 사용 허용

직장 문제로 이사로 잦은 A씨는 이사를 갈 때마다 이전에 살던 지역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볼 때마다 아깝고, 새로운 종량제봉투를 사는 것이 낭비로 느껴졌다. 국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전입신고시 기존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해당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거나 인증 스티커를 붙이면 해당 지자체에서도 쓸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되었다. 이제 조례 개정 등 추가조치를 한 지자체에서는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환경부, '15.8월)

울산 등 28개 지자체, 전입 후에도 기존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

(개선 전)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

(개선 후) 전입신고 시 기존의 종량제봉투를 해당 지자체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등 일정 조치를 거치면 사용 가능

10] 추가합격 대학에 대한 등록금 대출문제 개선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자녀까지 대학생 자녀만 두 명을 둔 A씨, 그러나 대학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달랐다. 14년도에 입학한 아들 B군은 여러 대학에 합격하였지만, 최초 합격한 대학에 학자금을 대출받아 납부한 이후 추가합격한 대학에 입학하고자 할 때 학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주어야 했다. 반면 15학년도 입학생인 딸 C양은 추가합격한 대학의 등록금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교육부, '15.1월)

'15. 1학기 신입생 총 1,830명에게 156억원 추가 대출 실시

(개선 전) 신입생·재학생 모두 학자금 중복대출 불가능

(개선 후) 신입생에 한해 학자금 중복대출 허용